추경열차 일단 출발…통과까지 '산넘어 산'

오늘부터 상임위 심사…국민의당·바른정당 송곳검증 예고

한국당 빠진 '반쪽'·공무원 증원 반대·청문 정국 등 험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가까스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빠진 '반쪽 심사'라는 한계와 함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세부 항목을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자리 추경이 빠르면 29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추경 심사를 위한 관련 상임위 일정을 조율했다.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내달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임위 개최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3일 상임위에 상정하고, 4~5일 소위를 거친 뒤 6일에 의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도 29일까지는 일정 조율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7개 상임위는 개회 요구가 접수된 상태"라면서 "아직 조율 중인 상임위도 늦어도 내일까지는 일정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 중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8곳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 착수하고, 이 가운데 예결소위 위원장이 한국당이 아닌 4곳은 심사에 더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한국당의 불참으로 전체적인 추경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심사 과정에선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이 국가 장기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가뭄대책과 농가지원 등의 항목이 추경에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중장기 재정부담과 인사적체 문제 등을 들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한다.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심사에는 참여하는 정의당의 예결위 소속 윤소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5당 민생 공통공약' 가운데 실업급여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며 "추경안에 포함된 LED 교체사업은 시급성 측면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추경에는 육아·퇴직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이 최대한 반영됐고 공무원 일자리 확충의 경우 생명이나 안전 분야 등에만 국한했다"며 "야당은 민생 추경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추경 심사가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는 인사청문 정국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환경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야권에서 벼르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부터 시작되면서 여야가 또다시 첨예한 대립 모드로 전환될 수 있어서다. 인사청문 국면에서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 추경에도 불똥이 튀어 일정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형배 광산구청장 "내년 광주시장 출마"

민선 6기 3주년 기자회견

"구정 완성도 높이기 올인"

민형배<사진> 광주 광산구청장이 민선 7기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28일 열린 민선 6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광주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민 구청장은 "사실 지난번 총선 때 나설건지 말건지 고민했었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때도 다음 제 정치적 길을 어떻게 갈지 고민했었다"며 "그런 선택 중 하나가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민주당내 경선 구도를 묻는 질문에는 "같은당 소속인 현 윤장현 시장의 입장이 중요하다"면서도 "우선은 구청장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만큼 광산구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는 후보 상호간에 시대정신이 결집한 충돌이 예상된다.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가 명백히 구분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광산구 행정의 사례를 열거하며 '중앙 독점구조'를 바꾸는 시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이날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며 일군 성과와 남은 1년의 구정 운영 방향도 밝혔다. 그는 "민선 5, 6기를 거치며 구청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표준을 세운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이 우리사회 변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광산의 혁신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핵심 열쇠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산발(發)' 정책의 전파 그리고 이것이 가져온 변화를 소개하면서 "남은 1년, 지난 시절 빛과 그림자를 꼼꼼히 살피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송영무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성 말하기 어려워"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음주운전·고액자문료 공세

與 "국방 개혁 적임자"

'忍…忍…忍'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의 질문에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지 않나'라고 묻자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이라며 동의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

하지만 그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정 의원의 질의를 이어받아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필요 있다, 없다를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정당한 절차,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김 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답하고 "제게 장관 취임의 기회가 있다면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 배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는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아당과 국방개혁 적임자라는 여당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며 한사코 내놓지 않을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저항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송 후보자 딸의 국방과학연구소(ADD) 특혜 채용 논란도 "몸이 안 좋아 연봉을 낮춰서 공공기관으로 옮긴 것을 특혜라고 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옹호했다.

반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은폐, 파쇄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당장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월 3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 "용퇴를 고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국방장관에 관한 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뒤로 갔다고 말할 수 있다"며 "즉각 지명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은폐 의혹, 고액 자문료 수수 논란 등에 사과하면서도 자진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영록 "추석 전 계란값 잡겠다"

농림장관 인사청문회…"닭 생산·유통단계 가격 공시 검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폭등한 계란값 안정 대책과 관련, "무너진 산란계(알 낳는 닭)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추석 이전까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계란값 안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달걀이 국민의 주·부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치킨값이 2만원 가까이 인상된 것은 결국 식품정책 실패의 일환이라는 지적에 "유통단계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농식품부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생산·유통단계마다 가격 공시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도 "닭고기 생산·유통 단계별 거래가격을 공시하는 제도, 장기적으로 축산물 가격 의무신고제 등을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치킨업계가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썼다.

김 후보자가 제시한 제도가 도입되면 도축, 가공 등 통상 5~6단계인 닭고기 생산·유통 과정상 마진이 공개돼 불합리한 가격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서는 폭락한 쌀값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제 시행만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며 "내년에 우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반드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에 1500억원의 생산조정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지난 정권 농식품부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공약 이행이 제대로 않았다는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쌀 생산조정제와 목표가격 인상, 전국 농업회의소 설치 등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라도 농민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2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간사 협의 결과 내일 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19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활동을 한 전직 의원으로서 사실상 '의원불패' 기록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